



●●● 목 차 ●●●



I . 일반현황	1
① 조직 및 정원	3
② 부서별 주요기능	4
③ 2026년 예산현황	5
II . 주요성과	7
III .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
① 노동정책과	13
② 노동권익과	19
③ 노동안전과	25
IV .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31
V . (참고) 주요 노동통계 현황	41
※ 간부공무원 명단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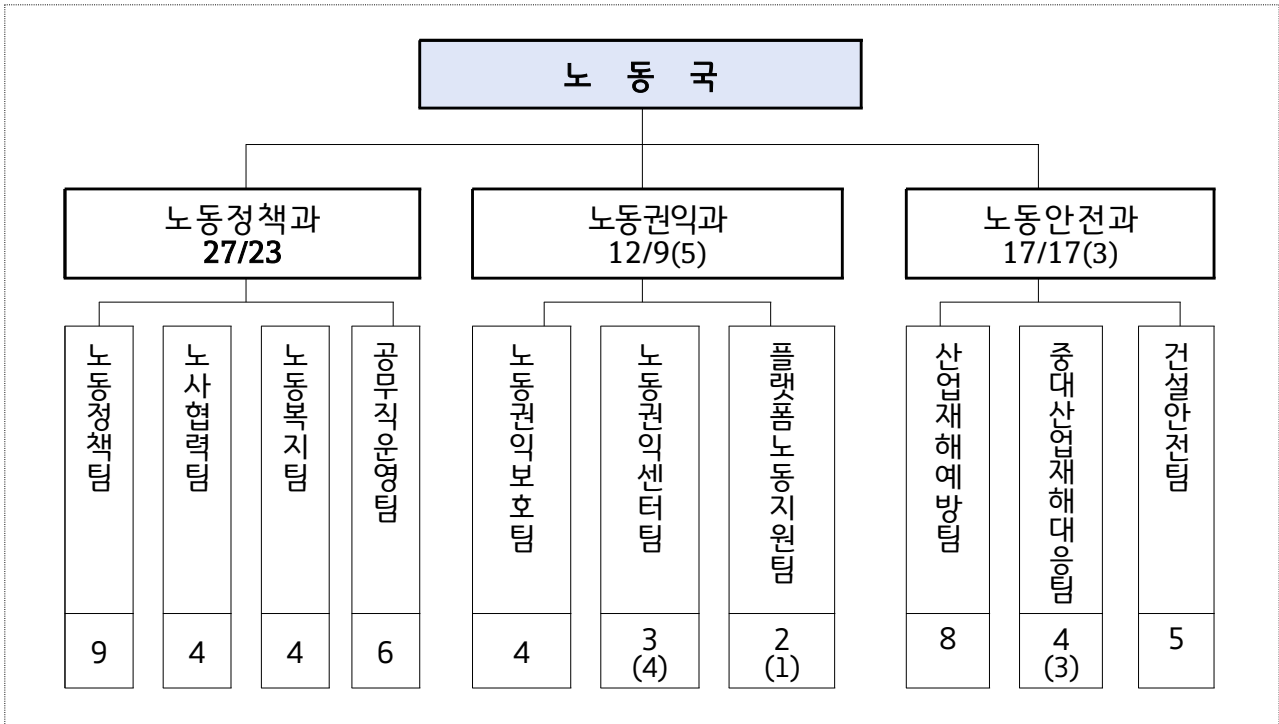
I . 일반현황

1

조직 및 정원

< 2026. 7. 1. 기준 >

① 조 직 : (현원) 1국 3과 10팀 49명(8명) ※ ()은 시간선택제임기제



② 정원/현원 : 56명/49명(8명)

구 분	정원/현원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시간선택제
노동국	56/49(8)	1/1	3/2	12/11	19/15	21/20	(8)
노동정책과	27/23	1/1	1/1	5/4	9/6	11/11	(0)
노동권익과	12/9(5)	-	1/0	3/3	4/3	4/3	(5)
노동안전과	17/17(3)	-	1/1	4/4	6/6	6/6	(3)

2

부서별 주요기능

부 서 명	주 요 기 능
노동정책과	• 지방정부 노동감독권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노동시간 단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노사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노동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 •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및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사, 복무, 보수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권익과	• 노동권익보호 지원사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노동권익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 취약 노동계층 지원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노동권익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플랫폼노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과	• 산업재해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예방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현업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건설분야 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 예산 현황

□ 2026년 노동국 예산 : 345.9억원 (국비 1.7 / 도비 344.2)

(단위 : 백만원, %)

2026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34,597	176	34,421	23,434	460	22,974	47.6%

※ 작성기준 : 본예산 기준

□ 세입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부 서 별	2026년 예산(A)	2025년 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계	176	491	△315	△64.2%
노동정책과	80	111	△31	△27.9%
노동권익과	96	80	16	20.0%
노동안전과	0	300	△300	순감

□ 세출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부 서 별	2026년 예산(A)	2025년 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계	34,597	23,434	11,163	47.6%
노동정책과	27,005	15,956	11,049	69.2%
노동권익과	4,472	4,619	△147	△3.2%
노동안전과	3,120	2,859	261	9.1%

② 노동복지기금 현황

□ 기금개요

- 목적 :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지원
- 설치년도 : 1999. 12. 31. (조례 제2960호)
- 전입금 : ('00~'04) 100억원 조성, ('19)20억원, ('22)37.5억원, ('25)20억원, ('26)50억원
- '26년 조성 및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25년末 조성액(가)	'26년 증감액				'26년末조성액 (바=가+나)
	계 (나=다+라+마)	전입금 (다)	이자발생예상액 (라)	사용액 (마)	
153	2,370	5,000	6	2,636	2,523

□ '26년 지원사업 - 15개 사업 26억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최종예산액	2026년 본예산액	증감액
합 계		2,636	2,636	0
1	노동자가족 송년의 밤	36	36	-
2	노동절 행사 지원	32	32	-
3	노사정 한마음 대회	111	111	-
4	노사 해외 연수	195	195	-
5	여성 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16	16	-
6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	100	100	-
7	노동자 인문 예술 강좌	71	71	-
8	노동가족 음악회 지원	180	180	-
9	경기노동문화예술제 지원	100	100	-
10	노동단체 국제교류	50	50	-
11	노총 장학문화재단사업 지원	1,250	1,250	-
12	택시노동자 장학사업 지원	300	300	-
13	한국노총 경기북부장학문화재단 지원	80	80	-
14	노사상생 리더십 과정	55	55	-
15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대응 역량강화 교육	60	60	-

II. 주요성과

□ 선도적인 노동정책 추진역량 강화

○ 경기도 노동감독권한 신속도입 추진

- 道 지방노동감독관 '26년 제2차 경기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 반영(170명)
- 취약사업장 대상 컨설팅 비용 국비 확보(2.1억원, 추경 반영예정)
- 지방노동감독 대비 도↔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사업장 합동점검(22개소)

○ 전국 최초 주4.5일제 시범사업 시행('25.6.1.~) *139개사 3,122명 참여 ('26.5.기준)

- (주요성과) 생산성 +4.3%, 고객만족도 +2.4점, 채용지원자 +7.4명, 이직률 -5.4%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 ('25년) 21회(실무 4, 분과 14, 특별위 3), ('26년 상반기) 10회(실무 2, 분과 6, 특별위 2)

※ 道 노사민정협의회 대외적 우수성 입증 : '2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유공 대통령 표창

□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노동부 공모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선정(국비 25억원 확보, 추경반영)

○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장 점검 및 위험요인 개선

- ('25년) 점검 45,756회, 개선 103,427건, ('26년 상반기) 점검 19,100회 개선 42,000건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우수기업 선정(25개사 인증 후 환경개선금 지원)

○ 건설공사장 외부전문가 현장자문 및 폭염 대비 안전용품 지원

- ('25년) 243개소 자문, 안전용품 지원(120개소 940개), ('26년 상반기) 76개소 자문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최대 80% 지원('25년 4,915건, '26년 모집중)



주4.5일제 정책토론회



노동안전지킴이 지도·점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 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1인 25만원)
 - ('25년) 2,400명 / 600백만원, ('26년 상반기) 2,600명 / 650백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공정수당 지급
 - ('25년) 2,756명 / 2,890백만원, ('26년 상반기) 574명 / 463백만원
-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4호)』 법인 설립 및 운영
 - 기금 32.6억원 조성, 노동자 1,861명 복지비 지급(1인 40만원, 노동절)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25. 1개소 신규설치) 및 운영('26. 4개소 운영)
- 현장노동자 및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25년) 411개소, ('26년 상반기) 178개소
- 전국 최다 규모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운영(거점 10개소 / 간이 22개소*)
 - *간이쉼터 22개소 중 4개소 2026년 신규 설치 예정(수원·화성·부천·안성 각 1개소)

□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보호 확대

- 道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상담소 운영 및 대상자별 노동교육 실시
 - ('25년) 노동상담 10,080건 맞춤형 교육 136회, 노동인권 강좌 8개 대학
 - ('26년 상반기) 노동상담 3,763건 맞춤형 교육 35회, 노동인권 강좌 13개 대학
- 아파트 종사자 인식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실시('25.10월, 파주)
- 플랫폼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
 - ('25년) 교육 98회, 안전용품 1,335건, ('26년 상반기) 교육 14회, 안전용품 417건



III.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 9기 노동국 추진방향

□ 노동 환경 변화 및 전망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26.12.8)으로 지방정부 노동감독 역할 강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노동권 보장 요구 증가 및 산업안전분야 취약노동자 안전요구 강화

□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목 표 **취약노동자 안전망 확대 / 선도적 노동정책 강화**

추진전략	주요 실행과제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1 지방노동감독관 신속도입으로 현장밀착 감독 2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 및 개선지도 3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 4 道사업장 안전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1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 2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3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4 아파트 경비·청소 및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5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노동권익 보호강화	1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통한 노동권익보호 2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및 역량개발 3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	1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추진 2 노사민정협의회 내실 운영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장안착 지원 4 비정규직 노동자 공정수당 및 생활임금 지급 5 경기도 공무원 인사관리 및 노사 교섭 추진



◆ 노동정책과

- ①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역량 강화
- ② 신뢰와 협력의 노사 파트너십 제고
- ③ 비정규직 생활안정 및 휴게여건 지원 강화
- ④ 지속 가능한 공무원 조직 운영

1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역량 강화

- ◆ 현장 중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노동정책 강화
- ◆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자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

□ 사업개요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26.12.8)에 맞춰 지방노동감독관 신속도입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각지대 노동 안전망 강화
- 도내 민간기업·공공기관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제도 운영 후 효과성 분석을 통한 단계적 확대 추진(15,046백만원)
- 「2026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다양한 노동정책 수요 대응 및 노동정책 방향 제시(100개 과제)

□ 추진현황

- 도 지방노동감독관(170명) '26년 제2차 경기도 지방공무원 총원계획 반영
- 노동감독 실시 전 취약사업장 컨설팅 비용 국비 확보(2.1억원, 추경반영 예정)
- 「2025년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토론회」 개최('26.3.10.)
 - 주요성과 : 생산성 +4.3%, 고객만족도 +2.4점, 채용지원자 +7.4명 이직률 -5.4%
- '26년 주4.5일제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및 시행('26.5.1.)
 - ※ 참여기업 현황('26. 5. 1. 기준) : 139개사 3,122명
- 「2026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26.6.8.) 신규과제 발굴(8건)

□ 추진계획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전 지방노동감독 조직·인력 구축
 - 행정기구·정원 조례 개정 및 노동감독관 인력확보(신규채용, 전보 등) : '26.7~12
- 취약 사업장 대상 노동감독관 점검분야 사전 컨설팅 추진
 - 임금체불 다수 발생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 자발적 개선 유도(250개소) : '26.10~12
- 주4.5일제 사업 추진 및 효과성 분석
 - '25~'26년 모집기업 단축 시행('26.5.~12.) 및 참여기업 추가 모집('26.7.~)

2

신뢰와 협력의 노사 파트너십 제고

- ◆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노동단체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제고
- ◆ 노동자 사기진작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 사업개요

-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로 협력적 노사관계 제고(750백만원)
- 노동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지원으로 노동복지 증진(1,550백만원)
- 노동자·노동단체 지원으로 노동자 사기진작(2,887백만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에 따른 현장안착 지원

□ 추진현황

- 다양한 노동 현안 논의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 노사민정협의회 개최('26.1.~6.) : 10회(실무 2, 분과 6, 특별위 2)
- 노사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노사 상생 네트워크 강화
 - 노동절 행사, 노사정 등반대회, 국제회의 참관 등 노사 상생 지원사업 추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에 따른 실무대응 지원
 - 道 상생협력 매뉴얼 구축 및 道·공공기관 직원 교육(4회)
 - 전담 노무법인 자문 협약 체결('26.5.~12.), 운영지침 제도보완 건의(→ 고용노동부, 5.19)

□ 추진계획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확산 관련 7개 세부과제 지속 추진
 - ※ 경기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경기 남·북부 사회적 대화 확산 간담회 등
- 노동복지시설 운영 및 노후시설 개선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시설 개선으로 노동자 안전·편의 제고
- 노사화합 프로그램 지원으로 신뢰와 화합의 문화 조성
 - 노사 산업재해 대응 역량강화 교육(8회) 등 17개 사업 추진
- 道 모범사용자로서 모델 정립 및 상생 노사관계 대응
 -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과 간담회 추진
 - 사용자 인정시 단체교섭 신속 추진

3

비정규직 생활안정 및 휴게여건 지원 강화

- ◆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정성 보상 및 생활임금 적용으로 삶의 질 향상
- ◆ 취약노동자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비정규직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및 생활임금제 운영으로 생활 안정
-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820백만원) 및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910백만원)

□ 추진현황

- 도·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및 생활임금 적용
 - 기간제 노동자 계약기간 만료 시 공정수당 일시 지급(401천원~1,537천원)
※기간제 퇴직자 574명, 463백만원 지급('26.1~5.)
 -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2,552원 적용 *전년 대비 3.3% 인상
※'27년 생활임금 기준액 산정 단기정책연구과제 추진 중(경기연구원)
- 취약노동자 휴가비 참여자 모집·선정,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참여자 2,600명 선정 및 휴가비 지원(1인 25만원), 휴게시설 개선완료(57개소)

□ 추진계획

-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공정수당 지급)으로 차별적 요소 완화
 - 근로기간에 따라 구간별 정액지급(401천원~1,537천원)
 - '27년 공정수당 계획 수립('26. 9.) : 지급률 상향(정부안 반영), 도 생활임금 인상을 반영
- 최저임금을 보완한 생활임금제를 통해 생활안정 도모
 - '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2,552원(월 2,623,368원) *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생활임금위원회 개최('26. 8.), '27년 경기도 생활임금 확정('26.9.10.限)
-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을 통한 문화·여가 활동 증대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2,600명(만 19세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 경기도 지원금 25만원(노동자 부담금 15만원)
-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마련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열악한 휴게시설 10개소(추진중)
 - 개소당 최대 2천만원 ~ 4천만원

4

지속 가능한 공무직 조직 운영

- ◆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무직원 인사·복무관리 추진
- ◆ 공무직원 권익 보장 및 향상을 통한 상생의 직장문화 조성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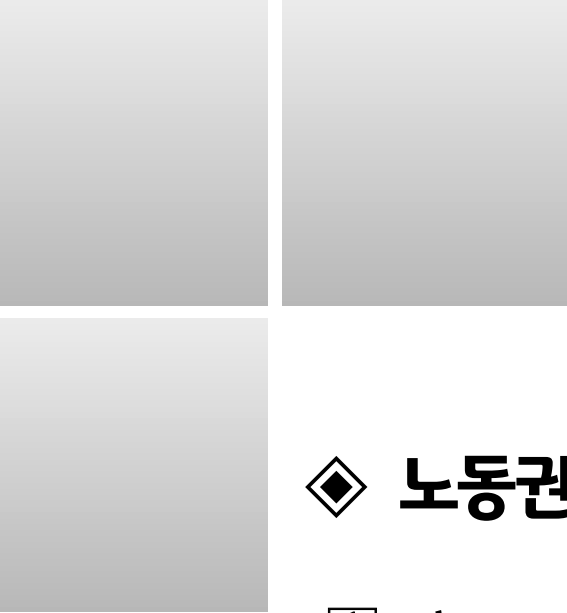
- 공무직원 채용·복무·교육 등 체계적 인력 관리
- 공무직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한 임금결정 및 근로환경 개선
 - ※ 道 공무직 현원 1,348명('26.5.31.)
 - ※ 道 공무직 노조 현황(도의회, 소방조직 포함) : 5개 노조 506명(전 공무직 중 38%)

□ 추진현황

- 직종별 전문성 고려, 직무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운영
 - 적정 인력규모 유지를 위한 '26년 공무직원 인력 운영계획 수립('25.12.)
 - 임금체계 개선 실무협의체(5회),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개선 용역」 완료('25.11.~'26.5.)
 - 공무직 기본교육(1회, 45명) 및 재취업 지원교육 실시(2회, 45명)
 - 직종별 표준 업무매뉴얼 작성 지원(17개 직종, 36개 부서)
- 노사관계 및 제도 개선
 - 근로시간 면제 한시운영 합의(도지사↔5개 공무직 노동조합, '26.4.16.)
 - '26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26.1~)
 - 노사협의회 분기별 개최(3회) 및 협의회 규정 전부개정 추진

□ 추진계획

-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직무 분석 및 인사·복무 관리
 -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반영하여 인사운영 제도 개선
 - 연간 인건비 집행 추이 등 재정 운영 현황 분석(분기별)
 - 장기 병가자 실태조사('26. 9.~) 및 복무 점검(수시)
-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현장 고충 수렴 및 소통 강화
 - 단체협약 내 근로조건 조항 점검 및 제도 개선사항 검토
 - 공무직 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 추진



◆ 노동권익과

①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

②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 및 노동환경 개선

③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추진

1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

- ◆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복지 기금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증진
- ◆ 노동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 발굴

□ 사업개요

-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道-시군-중소기업-정부 공동출연) 및 운영으로 중소기업 노동자(1인, 연간 120만원) 복지비 지원(558백만원)
- 유해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작업복 세탁 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990백원)
- 도내 물류단지 노동자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역할 정립을 통한 연구용역 추진으로 道 권익보호 정책 모델 발굴(100백만원)

□ 추진현황

-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4호)*』 법인 설립 및 운영
 - 기금 32.6억원** 조성 및 노동자 1,861명 복지비 지급(노동절 / 1인당 40만원)
 - * ('25년 조성) 양주시 1호, ('26년 신규) 화성시 2호, 의정부시 3호, 북부권역 4호(양주+동두천+연천)
 - ** 道 5.6억원, 시군 5.6억원, 중소기업 7.5억원, 고용노동부 13.9억원
-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작업복 세탁 지원 (안산, 시흥, 파주, 화성)
 - (설치장소) 도내 산업단지 내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 등
 - (이용실적) 671개 업체 89,693장 세탁, 일평균 224장(26.5기준)

□ 추진계획

-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노동자 복지비 추가 지급
 - 노동자 1,861명 대상, 추석 및 설날 복지비 각 40만원 지급(지역화폐)
- 노동자작업복 세탁소(4개소)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방식) 사업장별 수거-세탁-배송 (요금) 상·하복 1벌 1,000원(동복 2,000원)
- 「물류단지 노동실태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용역」 추진으로 道 정책모델 발굴('27.2한)
 - 道 물류단지(14개소) 실태조사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 마련

2

노동권의 보호체계 강화 및 노동환경 개선

- ◆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동상담·권익교육 운영
- ◆ 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으로 근로조건 향상

□ 사업개요

- 노동상담 인프라 구축·운영으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 도노동권익센터(남·북부), 마을노무사제(31개시군, 120명), 노동상담소(도 3개소, 시군 6개소)
-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노동권익 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 노동권익 교육 및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학점인정) 운영(350백만원)
 -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및 아파트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사업(1,411백만원)

□ 추진현황

- 마을노무사 및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한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3,763건 / '26.1~6월)
 - *상담유형별 : 임금체불 1,224건, 징계·해고 836건, 산업재해 262건, 기타 1,441건
- 노동권익 교육(35회*) 및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13개 대학)
 - *취약노동자 20회,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6회, 교육방송(라디오) 9회
- 아파트 경비·청소 휴게시설 개선중(121개소) 및 인권보호 캠페인 활동(30회)

□ 추진계획

- 도 노동권익센터 및 마을노무사를 통한 장애인 노동자 상담강화
 - 장애인 유관기관 협의(발굴·연계) ⇒ 마을노무사 초기상담 및 구제신청 지원('26. 8~)
- 맞춤형 노동권익(법률) 하반기 교육 및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 노동권익 교육운영 94회(노동자 55회, 소규모사업주 27회, 교육방송 12회)
 - 대학생 사회진출 전 노동인식 제고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2학기 운영
-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추진 및 관리종사자 갑질피해 현황 등 모니터링단 운영
 - 도내 공동주택 단지 휴게시설 개선(하반기 145개소, 개소당 5백만원)
 - 모니터링단 운영(5명)을 통한 노동권익 침해 사례발굴 및 교육·상담(115회)

3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추진

- ◆ 플랫폼 노동자¹⁾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 ◆ 안전·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거점쉼터 운영 활성화 및 권익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설치로 휴식권 보장 및 환경개선(3,200백만원/도·시·군=3:7)
-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493백만원)
-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 및 소규모 모임 지원으로 민관 협업체계 구축(2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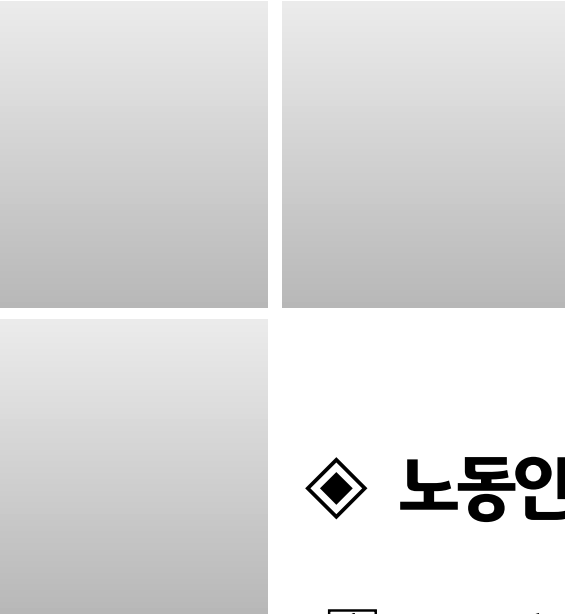
□ 추진현황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교육,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플랫폼노동자 권익개선
 - 이동노동자 쉼터 28개소(거점 10, 간이 18) 운영 및 안전교육 실시(6회)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자 모집 및 홍보('26.5.~7.)
- 플랫폼 노동자 역량개발 지원 시책 추진
 - 플랫폼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직무, 손해사정, 건강관리 등) 14회
 - 종사자 간 관계형성을 위한 소규모 모임 지원사업 추진('26.6.~10.)

□ 추진계획

-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4개소(수원, 부천, 안성, 화성) 신규 설치('26.8.~11.)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강사양성·안전·주행실습 교육(22회), 온라인교육(2,500명), 인식개선 캠페인(6회)
 - 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최대 80% 지원(약 3,000건)
- 플랫폼 노동자 역량개발 교육 및 민·관 협업체계 운영
 - 역량강화 교육(26회), 안전용품 지원(800건), 소규모 모임지원(12건)
 - 플랫폼노동 민·관 협의체 운영(2회), 직종별(배달·대리기사 등) 회의체 구성 및 운영(상시)
- 道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26.5.~11.)
 - 플랫폼 노동 지원사업 정책수요 분석을 통한 플랫폼 노동 기본계획(3개년) 수립방안 제시

1) 플랫폼노동자는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 달리 위탁, 도급,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달, 대리운전, 호출·중개 앱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배정받고 노무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함.



◆ 노동안전과

①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② 도 사업장 안전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③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

1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 산업재해 예방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로 노동안전 보호

□ 사업개요

- 산업단지 밀집, 태양광 설치공사 증가,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고사망 집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2,500백만원)
- 노동안전지킴이의 소규모 사업장 집중점검 및 위험요인 개선(4,874백만원)
 - ※ 사망사고 다수발생 유형 : (규모) 50명 미만 사업장, (업종) 건설업, (유형) 떨어짐 사고
- 노동안전 취약분야 산재 예방 및 우수기업 인증·지원으로 사업주의 산재 예방 자율참여 유도(750백만원)

□ 추진현황

-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보(2,500백만원)
 - *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 위험성 평가(350개소),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1,500건)
 -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안전교육(30회, 1,200명)
- 노동안전지킴이 산업현장 점검(19,100회) 및 위험요인 개선(42,000건)
 - ※'26년 점검 목표 횟수 : 42,000회 / 노동안전지킴이(112명) 일평균 약 4.6회 점검
- 위험성 평가·VR체험·안전교육·화재예방 물품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맞춤형 교육·상담 및 우수기업 인증·지원 등(138개소, 1,655명)

□ 추진계획

-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노동부 합동점검 및 성과보고('26.9~12.)
-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지도 추진, 사업성과 공유 및 토론회('26.12.)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25개사) 개최 및 인증서 수여('26.8.)
- 고위험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 추진('26.8~)
 - 하수처리시설 등 고위험 공공시설 현황 파악 및 시군 수요 조사

2

道 사업장 안전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 ◆ 道 종사자 및 도급 계약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 ◆ 체계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조성

□ 사업개요

- 道 종사자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道 사업장 상주수급인 안전·보건의무 이행
 - ※ 道 사업장 종사자 수 : 18,524명 / 도급사업 : 2,312건 ('26.5. 기준)
 - ※ 종사자 범위 : 도 소속 공무원·공무직·기간제, 노무 제공자, 도급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
- 道 종사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 8개 업종* 분리 및 전문 인력 운영
 - *공공행정업, 연구개발업, 농업, 교육서비스업, 수도업, 자연공원운영업 등
- 도 쏠 부서 위험성 평가(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 법적 의무이행 기준 준수 등) 추진

□ 추진현황

- 道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장점검('26.4.17.~6.15, 55개소)
-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집합 교육('26.4.2~4.9, 287명)
- 道청사(광고청사, 옛청사, 북부청사) 위험성 평가 용역 실시('26.4.8.~6.6.)

□ 추진계획

- 실·국·원·소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94명) 역할 수행 지원
 - 도급(용역, 위탁) 종사자 관리 방안 매뉴얼 개정 추진('26.8.)
- 道 안전·보건관리자 점검을 통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 현업근로자 사업장(46개소) 대상 안전검사기계(428개), 화학물질(2,259종) 등
- 道 사업장 안전·보건 법령* 이행 여부 하반기 점검 실시('26.9.~11.)
 - 부서 자체점검 → 전문기관 현장점검 *22개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관리 대상별 안전·보건 법정 의무 교육 실시('26.7.~10.)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도지사, 실·국·원·소장),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업종사자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추진('26.8.~)
 - 도·공공기관 하청 현황 실태조사, 도·공공기관 시범 운영계획 수립

3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

- ◆ 건설공사장 현장지원 및 예방활동 강화로 안전 작업환경 조성
- ◆ 道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체계화

□ 사업개요

- 외부전문가 현장자문 및 안전용품 지원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290백만원)
-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교육,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로 안전문화 확산(10백만원)
- 건설안전협의회, 건설사고조사·부실방지위원회 운영으로 안전정책 강화(15백만원)
-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실태 실시간 확인·관리(1,803백만원)

□ 추진현황

- 소규모 건설공사장 대상 현장중심 안전관리 지원
 - (50억 미만) 외부전문가 활용 노동자·시설물 안전 현장자문(76개소·해빙기·떨어짐 대비)
 - (20억 미만) 폭염 대비 휴게시설·물품(이동식 그늘막, 안전모 쿨패드 등) 지원
 - ※'25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460개소 중 339개소^{23개} 시·군 배부 완료('26.6.30.기준)
- 건설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 교육 추진('26.4.)
 - 시·군 공무원, 공사참여자(300여명) 건설안전 신규제도 및 사고사례 등 전파
-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26.9.30. 준공예정)
 - 건설현장 정보 데이터화 및 안전실태 실시간 확인·관리를 위한 관제 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폭염·풍수해 및 동절기 대비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 추진
- 소규모 건설공사장(5억 미만) 추락방지 용품 등 안전용품 지원('26. 7.)
-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26. 7., 10.)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6. 12.)
-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안정적 정착 및 현장 활용 확산 추진(시범운영: '26.5.~9.)
 - 사용자 교육, 시스템 기능 이용 후 피드백 반영으로 기능 최적화 등 수행
 - 건설현장 업무 관련자(시공자, 감리사, 발주처) 안전관리 참여 유도

IV. '26년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1.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2. 주4.5일제 사업 추진
3.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4.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 추진
5.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지원

1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 추진배경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26.4.7.) 및 시행('26.12.8)에 따른 노동 감독권한 지방위임으로 연차별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필요

□ 추진사항

- 민선7~8기 노동감독관 위임 관련 총 40여회 정부 건의('18~'25)
- 노동감독관 위임 TF 자문회의 개최('25.9~12)
- 경기권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 구성 및 업무협의('26.5.6)
-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등 소요재원 국비지원 지속건의('25.11~'26.5)
- 지방노동감독관(170명) '26년 제2차 경기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 반영
 - 도전입 공고('26.6.10) 및 7급공채 공고('26.7.1), 8·9급경채 추진('26.9 예정)
- 취약사업장 대상 컨설팅 비용 국비 확보(2.1억 추경반영 예정)

□ 추진방향

- 그간 중앙 노동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 요소 확대 점검
 -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 *사업장 수 : 530,611개소 (전체 대비 96%)
 -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신생 사업장, 체불 상담건수가 많은 사업장, 상하수도 맨홀 작업장 등 밀착 관리 필요 사업장 중심 감독
- 고용노동교육원 교육(12주)과 별도로 외국인 노동자 비자, 불법 파견 등 道 노동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마련으로 현장 대응 전문성 제고

□ 향후계획

- 행정기구·정원 조례 개정 및 노동감독관 인력확보(신규채용, 전보등) : '26.7~12
- 취약사업장 대상 노동감독관 점검분야 사전 컨설팅 추진(250개소) : '26.10~12
- 노동감독관 직무교육* 실시 후 지방노동감독 추진 : '27. 상반기~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교육 : 기본교육 12주 소요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조(근로감독관 교육)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년 ~ 2030년
- (사업예산) '26년 15,047백만원(도비 100%) *25년 8,373백만원
- (사업대상) 도내 300인 미만 민간기업(중소·중견) 및 공공기관
 - ※ 참여기업 현황('26.5월 기준) : 139개사 3,122명
- (사업내용) 장려금(월27만원/1인), 컨설팅·근태시스템 지원 및 효과 분석

« 주요성과 »

- ▶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 주당 노동시간 -4.7시간, 임금유지 또는 소폭상승(+2%내외)
- ▶ 생산성 향상 : 생산성 +4.3%, 매출액 +7.4%, 외부 고객만족도 + 2.4점
- ▶ 이직률 감소, 채용지원자 증가 : 이직률 -5.4%, 채용지원자 +7.4명
- ▶ 노동자 삶의질 개선 : 일생활 만족도 +0.2점 여가생활 만족도 +10.3점

□ 추진내용

- 노동시간 단축 적용이 어려운 업종 대상 맞춤형 단축모델 도입
 - 노동집약적 기업, 교대근무 사업장 등 전면적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부분적·단계적 단축모델 마련
 - 세브란스병원 등 교대근무제 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의료기관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
- 도내 공공기관의 주4.5일제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 선도사례 발굴
- 주 4.5일제 도입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기업 관심 제고
 - 기업 여건에 맞춰 자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모델 개발

□ 향후계획

- 道 공공기관 대상 수요 조사 추진 : '26.7.~8.
- 주4.5일제 민간기업 상시모집 추진 : '26.7.~12.
- 주4.5일제 효과분석 후 중앙부처 공유 및 사회적 논의 확대 추진 : '27.1~

3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일명 지중해 사업)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 추진(노동부) ※ 11개 시도 선정(공모 1위, 최대금액 확보)

- ▶ '25년 전국 산재 사고사망자 872명 중 道는 227명으로 사망자수 1위(전국의 26%)
- ▶ 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 0.40(전국평균 0.39 / 정부 “30년까지 OECD평균 0.29로 감축목표”)
- ▶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건설업, 떨어짐(추락), 60대 이상에서 최다 발생

- (사업대상) 산업단지 내 중소·영세 사업장,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 공사 등 고소작업 현장, 외국인노동자

- (사업예산) 25억원(국비 100%)

□ 필요성

- 안전관리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중소·영세사업장 위험성평가 이행 어려움
- '25년 道 사고사망자 227명 중 떨어짐(추락)사고가 사고원인 1위(79명, 35%)
- '25년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고사망자 77명 중 경기도가 32%(25명) 차지

□ 추진내용

- (위험성평가 지원) 산업단지 내 중소·영세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를 통한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350개소)
 - 유해·위험요인 발굴시 근로자 참여 강조,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부과제도 안내
-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지붕·고소작업 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위험요소 점검·분석을 통한 즉각적인 개선방안 지도(1,500건)
 - 노동안전지킴이(112명)의 현장제보(오픈채팅방) 활용을 통해 즉각적인 지도 실시
- (외국인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외국인노동자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 및 VR체험,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이름 새겨진 안전모 지급)’ 연계(30회, 1200명)
 - 사업장에 찾아가는 교육 및 AI 기반 실시간 다국어 통역 적용으로 참여도 제고
 - * 외국인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야, 너” 등 호칭문화 개선)

4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 추진

□ 사업개요

- (수당개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지급 하는 보상 수당
- (지원대상) 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
- (지원내용) 고용기간 총 급여의 5% ~ 10% 차등 지급

□ 현안사항

- 정부안('27년 도입) 대비 경기도 공정수당 지급 기준 조정 필요
 - 정부안 공정수당은 기준금액(최저임금 118%)의 8.5%~10% 수준
 - 경기도 공정수당 지급률(5%~10%)과 비교 시 장기근속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설계

※ 경기도 공정수당과 정부안 비교

(단위 : 천원)

근 무 기 간		1~2개월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11~12개월
경기도 (‘26년 기준)	지급액	401	842	1,177	1,404	1,525	1,537
	지급률	10%	9%	8%	7%	6%	5%
정부안 (‘27년 기준)	지급액	382	846	1,260	1,622	2,055	2,488
	지급률	10%	9.5%	9%	8.5%	8.5%	8.5%

- 도내 시·군의 경우 제도 미도입 상태로, 지급대상·지급률 등 공정수당 세부 운영 기준이 부재하여 향후 제도 시행 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및 행정 혼선 우려

□ 개선방안

- 경기도 공정수당의 정책적 선도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안 대비 동일 또는 동일 수준 이상의 지급 구조로 재설계
- 시·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수당 운영 통합 기준 마련

□ 향후계획

- [도]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7년 공정수당 지급 기준(지급액 및 지급률) 설계·수립 : '26. 9월 중 ※생활임금은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됨
- [시·군] 공정수당 운영방식·절차 등을 포함한 기준 마련 : '26. 12월 한

5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추진목적)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고용 안전성 도모
- (사업대상)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4개 기금* 설립·운영(신규 3개, 운영 1개)
* '25년(양주), '26년(화성, 의정부, 북부권역(양주+동두천+연천))
- (사업기간) 5년 지원(고용노동부 5년, 道·시군 3년)
- (사업예산) 558,300천원(출연금, 노동자 1,861명×30만원)
- (사업내용) 노동자 1,861명 대상, 연 복지비 120만원 지급(노동절, 명절 등 3회)
- (조성규모) '26년 32.6억원(기업 7.5, 道·市 각 5.6억원, 고용노동부 13.9억원)
※ '25년 8.9억원(463명 기준/1호 기금), 향후 5년간 115.49억 원 기금조성 예정

기금(지역)	소속 기업(수) / 지원 노동자(명)	기금규모(억원)					법인 설립일
		합계	도비	시군비	국비	중소기업	
총계	159 / 1,861	32.6	5.6	5.6	13.9	7.5	
1호(양주)	39 / 480	8.4	1.4	1.4	3.6	1.9	'25.3.20
2호(화성)	39 / 489	8.6	1.5	1.5	3.7	2.0	'26.4.8
3호(의정부)	40 / 414	7.2	1.2	1.2	3.1	1.7	'26.4.3
4호(양주+동두천+연천)	41 / 478	8.4	1.4	1.4	3.6	1.9	'26.4.3

※ 정부지원금에 따라 총액은 변경되며, '28년부터 법인1호, '29년부터 법인2~4호 지자체 출연 없음

- ▶ (공동근로복지기금) ① 둘 이상의 기업, 지자체가 ② 공동으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시에, 정부가 출연금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 (국비지원) 1개 기금에 중소기업 30개소 이상 참여시, 정부 5년 내 최대 20억 누적 지원

□ 향후계획

- (복지비 지급) 노동자 1,861명 대상 복지비 지급(추석, 명절)
 - 1인당 40만원 각 지급(지역화폐, 총14.9억원) *노동절(5.1) 복지비 지급완료
- (간담회 개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사항 공유 및 활성화 추진 방안 등